

종합·국제

■광주시의회 시정 질문

광주시의회는 25일 제1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광주시 행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조호권 의원(민주·북구4)과 교육사회위원회 김동식 의원(민주·서구2)은 이날 일자리 창출과 김치산업 육성, 저출산·고령화 등의 실상에 대해 추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자리 창출 '속빈 강정' = 조호권 의원은 광주시가 일자리 만들기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1년 미만의 임시직이 태반을 차지,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따르면 시가 상반기 동안 만든 일자리는 1만8천315개로 올 목표 2만1천535개의 85%의 실적을 거뒀다. 그러나 올들어 새로 만든 일자리 중 70%인 1만2천748개가 1년 미만의 임시직이고, 6개월 미만도 4천170개에 달했다. 조 의원은 특히 "자활근로사업 3천626개까지

“생산·매출 급감 ‘김치산업’ 대책 있다” “13만 4천개 일자리 창출 꼭 달성할 것”

실적으로 잡았는데 이는 일자리 창출로 보기에 는 무리가 있다”면서 “실제 취업 성공률도 3.7%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업유치와 경기 활성화에 따른 안정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광주시의 3대 주력산업(자동차·디지털가전·광산업)의 일자리 창출 목표는 4천441개였지만 상반기 동안 1천514개로 34%에 머물렀다. 조 의원은 “광주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면서 구조적인 질적 개선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5년동안(2006~2010년) 13만4천개 일자리 창출은 자체적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전문성이나 객관성이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면서 “경제여건의 변화에 맞춰 계속 보완 발전시키도록 차질없이 목표를 달성시키겠다”고 밝혔다. ◇광주 김치산업 고사 위기=조 의원은 이어 “전국 김치산업은 2005년 기생충알 파동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김치대추제를 열고 있는 광주지역은 매출과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지역 김치 매출과 생산량은 2004년 142억원, 5천680t에서 2005년엔 108억원, 4천320t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의 경우 매출액 63억원, 생산량 2천520t으로 3년 만에 반 토막이 됐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김치 판매에서도 ‘전라도 김치’는 판매 비중이 23%에 불과, 서울·경기(28%)와 충청(27%) 등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 2005년에는 45%로 1위였다. 업체 수도 2004년 13곳에서 9곳으로 줄어들었다. ◇이동학대 증가 속 예산은 인색=김동식의 의원은 “광주의 아동학대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예산은 보건복지부 권고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2년에 101건이던 광주 아동학대가 2004년 115건, 2005년 160건, 2006년 186건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1~7월에 만 110건이 확인되는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美 산불 방화용의자 2명 사살·체포

피해액도 1조원 넘어서...부시 재해지역 선포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5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5일 산불로 인해 3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다고 공식 확인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어 지금까지 주택 1천436채를 포함해 모두 1천 664채의 건물이 화재 피해를 입었고, 2만5천채의 건물이 화재 위험에 노출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대피도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간접 사망자를 포함할 경우 사망자수가 크게 상회할 것이라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면적도 전날 40만에이커(약 1천620km)에서 42만6천에이커(1720km)로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EQECAT은 보험처리자가 되는 물적피해만 1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 예측을 내놓았다. 한편 화재 발생 5일째인 이날 캘리포니아 지역 특유의 강한 바람이 잦아들면서 진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측은 이날 개선된 기상조건으로 인해 소방당국이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카운티 지역에 발생한 화재 진압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이 지역에선 산불이 발생한 틈을 타 새로운 불을 내리는 방화범 1명이 경찰에 사살되고, 1명이 체포되는 등 혼란이 가중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전날 캘리포니아주를 주요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샌디에이고에서는 현지 한인회가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한편, 모금활동을 통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로스앤젤레스AP·AFP=연합뉴스

과거사위가 밝힌 신군부 법안·언론인 탄압 진상

월주 스님 등 강제 연행 물·전기 고문

전두환씨 “10·27 법안 몰랐다” 증언은 거짓

신군부가 1980년 10월27일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의 스님과 불교 관련 인사 등 153명을 강제연행하고 전국의 사찰·암자 5천731곳을 일제 수색했던 이른바 ‘10·27 법안’ 사건의 진상이 규명됐다. ◇“전두환씨 법안사건 보고받았”=전두환 전 대통령은 1989년 12월31일 국회 5공 청문회 증언에서 10·27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980년 12월11일 박기종 당시 정화중흥회의 의장 등 승려 8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문답형식의 대화를 나눈 면담자료는 전 대통령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이해동(왼쪽 세번째)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국방부에서 1980년 신군부에 의한 언론통제 사건과 ‘10·27 법안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실은 확인됐다. 서빙고보살로 연행된 월주 스님은 투서 내용을 근거로 취조를 당했으나 담당수사관은 허위 투서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합수단은 월주 스님에게 총무원장 사퇴서를 강제로 받았다. ◇“군회법 무지비한 법당 난입”=당시 연행됐던 월주 스님은 “10월 말께 문경 봉암사로 쳐들어온 군인들은 모든 스님들을 법당 앞으로 모이게 하고 줄을 세웠다. 수사기관에 연행된 스님들은 무릎을 꿇게 한 상태에서 각목을 집어넣고 무릎 누르기, 새끼

K-1공작계획, 전두환 사령관이 결재

보안사 언론 조정반 주도...언론인 순화·회유

과거사위 관계자는 “K-공작은 전두환을 최고 인물로 만들기 위한 언론공작”이라며 “K-공작계획의 문건 발견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언론인 정화기준 3등급=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는 1980년 8월 정화 대상자를 A,B,C급으로 나눠 문화공보부에 통보했다. A급은 국시부정 행위와 제작거부 주동, 특정 정치인 추경, B급은 제작 거부 주동 및 선동, 부조리 행위자, C급은 단순 제작 거부부조, 부조리 행위자 등이다. 정화사유로는 국시부정(10명), 반정부(243명), 부조리(341명), 기회주의,무능(123명), 근무태만(3명) 등이며 아무런 이유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도 109명에 달했다.

◇해직언론인 취업제한=보안사는 해직언론인 711명에 대해 신분별로 취업제한기간을 줬다. 당시 부국장 이상 42명은 1년, 부장 이하 627명은 6개월, 나머지는 영구제한 조치를 취했다. 이후 A급 13명은 영구, B급 96명은 1년, C급 602명은 6개월로 제한기간이 바뀌었다. 보안사는 해직 언론인 가운데 49명을 A,B,C,D등급으로 나눠 동향을 분석했다. 과거사위는 “외관상으로는 한국신협회와 한국방송협회의 자율 결의 형태였으나 실제로는 국보위가 국시부정 행위자, 제작거부 주동자 등을 해직한다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보안사가 주축이 된 합동수사본부에서 작성한 해직 대상자의 명단을 문공부가 각 언론사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BBK 김경준 귀국 가시화

美 법원, 송환유예 신청 기각 내달말 송환 가능성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대리인인 김백준 전 서울메트로 감사장이 BBK사건에 연루된 김경준씨의 한국 송환을 유예해 달라며 제출한 신청서가 24일(현지 시각) 미국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감사의 변호인측이 이날 김씨에 대한 한국송환 유예신청서를 철회하긴 했지만 이와는 별도로 LA 소재 연방법원에서 김씨 한국 송환 유예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김씨의 민사재판 변호를 맡고 있는 심원섭 변호사는 이와 관련, “(김 전 감사 변호인측이) 김씨 송환유예 신청을 철회했지만 연방법원에서 이와는 별개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 검찰의 톰 로체 공보관은 이날 “지난 19일 김백준 전 감사의 미국측 변호인이 제출했던 김씨

의 한국송환 유예 신청서를 오늘 철회했다”며 “이로써 김씨의 한국 송환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 셈”이라고 밝혔다. 김 전 감사측 변호인단은 지난 18일 미 연방 제9 순회합송법원이 김씨가 신청한 ‘자발적 항소 각하 신청서’를 받아들여 한국송환이 가능토록 결정하자 다음날 이 결정에 유예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본인이 한국 송환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를 들지 않거나 신청하거나 국공부가 특별한 반대 의견을 내보지 않는 한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이다. 미 국무부는 김씨 송환 문제와 관련, 니컬러스 벤즈 정무차관에 게 권한을 위임한 상태이며 김씨의 송환 날짜가 11월 28일이나 29일경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전액국비수강생모집 컴퓨터 부동산실무 현대직업전문학교

7급 공무원 합격특강 79급 공무원 합격특강

공무원 5만명 증원(2007년부터 2010년까지) = 공무원 합격은 한빛이 주도한다 7급 공무원 개 11월 11일

연료비가 획기적으로 절감되는 난방 '칼레오' 원적외선 필름난방이 책임집니다.